

# 국민 권익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테마기획

행정 심판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 권익은 '관심'입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따스한 손길을 내립니다.  
사소한 이야기 하나까지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해도  
변함없이 국민들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 국민 권익

 **AUTUMN**  
ACRC NEWSLETTER 2017. Vol.54

### ACRC 풀어보기

- 이슈 돋보기 04**  
2017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헤드라인 뉴스 08**  
시기별 위원회 주요 단신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부서 탐방 10**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처방전'
- 케이스 스토리 14**  
대구 달성군 죽곡10리  
환경피해 예방책 마련
- With ACRC 16**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의 하루
- ACRC Toon 20**  
2016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발행일 2017년 9월 11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박은정  
편집인 곽형석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032-423-1988

### 연간 기획 ; 청렴韓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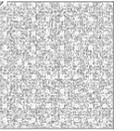
- 24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장 큰 액수' 과태료 부과사례
- 26 청렴韓 이야기**  
하얀 세상을 꿈꾸다. 청렴교육 DREAM
- 28 청렴韓 변화**  
공익신고로 함께 만드는 깨끗한 세상
- 30 청렴韓 우리**  
러시아와 한국의 청탁금지법은 '다른 길'

### 테마 풀어보기 ; 행정심판

- 32 테마리포트**  
행정심판 기능 및 중점과제
- 36 테마 인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거부사건  
행정심판 인용 결정
- 38 테마 특특**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40 테마 스토리**  
행정심판,  
그것이 '더 자세히' 알고싶다

### 세상 풀어보기

- 44 트렌드로 세상 보기**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플랫폼' 이야기
- 46 건강 100세**  
대한민국 4대 중증질환 예방  
\_ 뇌혈관질환
- 48 청렴 인물 답사기**  
전라남도 강진  
다산 정약용 유적지 탐방길
- 52 독자 마당**  
독자 퀴즈와 후기





# 2017 국정과제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정리. 편집실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그 중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과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15단계 하락한 52위를 기록했으며 점수는 53점으로 2008년 이후 최저다. 이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평균 대비 15.6점이 낮은 청렴수준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 반국민 51.9%가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민권익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 10가지를 소개한다.



### 1. 반부패 정책협의회 복원 및 확대

과거 참여정부에서 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반부패 대책 수립 및 기관별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 개정을 통해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관계 기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맡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대책 마련

반부패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반부패 개혁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의 동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국가 전체 차원의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처벌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기업 윤리경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복원 및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킨다. 2018년 상반기에 반부패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3. 반부패 정책 대상 범위 확대

행정부의 반부패 경험을 입법부 및 사법부와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자 한다.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및 '법원 청렴도 측정' 모형 개발 지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반부패 정책을 확산한다. 또한 공공재정을 지원받은 개인·단체를 국민감사청구권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4. 범정부적 반부패 제도 개선 추진

기관 간의 협업으로 부패 취약분야의 법·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부패발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고위공직자 권한 남용, 특혜 제공 등 구조적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기능을 활용하여 부패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다.



### 5.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적 업무 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공직자의 가족, 친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 실태를 분석하여 올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우선 도입한다. 또한 공직자가 직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에 행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 6. 재정 누수 등 예산낭비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징벌적 환수제도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근절하고자 한다. 범정부 ICT 시스템과 국민권익위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연계하여 공공재정 누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부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 7.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처리 수준의 향상

부패·공익침해 신고 활성화와 내실 있는 사건 처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통해 부패 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내부 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조사권 기능 보강, 직접 고발 고위공직자의 범위 확대 등의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자의 불이익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8. 기업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지원

공직사회 중심의 반부패 활동을 부패의 주요 공급요인인 기업 등 민간 분야로 확대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우수 반부패 기업에 대한 양별 면책규정의 구체화를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전문 기업윤리 강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준법 담당자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9.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 확산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 정책 정착 및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과 교육훈련 기관, 각급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 강사 양성, 청렴콘서트 등 효과 높은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 미래세대와 민간기업, 외국 공직자 교육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 10. 대외 국가 청렴 이미지 제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정부의 반부패 청렴 노력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고자 한다. 국제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새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가, 기업인 등 평가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국제 반부패 라운드(G20, APEC, ADB/OECD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성과를 적극 알린다.

# ACRC

## HEADLINE NEWS



### AUTUMN

ACRC NEWSLETTER 2017. Vol.54

#### 한 눈에 보는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뉴스



1

### 제6대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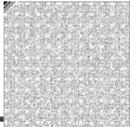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박 신임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사회 최대 화두는 ‘불공정’이라며 “공정사회, 맑은 사회에 대한 국민적 갈구가 지금보다 더 높은 때는 일찍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국민의 절실한 소리에 다가가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면 최일선에서 국민과 만나는 우리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새로운 각오로 국정철학을 담은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국민권익위가 종합적인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효과를 내야하며 이를 위해 국민권리구제와 부패감찰, 행정청의 자기통제를 구현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갈등 민원해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집단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민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를 조정·해결하는 전문적 역량 강화에 노력해 달라라는 것이다. 셋째, 국민신문고 운영과 민원정보 분석 등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인 부패척결과 고충해결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주문하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는 ‘호민관’ 역할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호민관의 진정한 권위는 남을 대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못다함에 대해 전전공공하며 스스로 겸손한 데서 나온다.”며 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이 호민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반부패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2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21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활동 10개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는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재구축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과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복원 또는 상설 협의체 구축과 청렴 문화운동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에 대해서 YMCA 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은 “반부패협의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훈령을 개정하여 민관협의체를 반부패협의회 산하기구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자 보호, 청소년 대상 반부패 교육, 청탁금지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충남 보령시 장고도, 여객선 운항 문제 해결

충남 보령시 장고도 주민들은 안면도 부근 육지로 이동할 때 여객선을 이용했다. 그런데 원산도-안면도 간 연륙교 신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여객선이 끊겨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공사를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실시설계 당시 이 문제를 합의했다는 입장이었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 중단 문제는 연륙교 공사 때문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장고도 주민 120여 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12일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저수심 지역에 동방위 항로표지를 설치 및 관리해 연륙교 공사가 종료되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여객선사를 관리하기로 했고, 연륙교 설계 및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주)는 공사기간 동안 장고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3

### 새 정부 반부패 의지 UN서 소개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반부패 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은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UN 주관 고위급 국제회의로서 2013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경호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반부패 공약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추진할 계획인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복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 부정환수법 제정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 활동 강화 등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추진해 성공적으로 완료된 베트남 부패방지시책평가 전수사업의 경험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4

### 행정심판 발전방향 논의 간담회 참석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지난 6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내방해 김현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구 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장희 사무총장, 김성만 제1국제이사도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심판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상민 위원장은 “심판위원 70명이 연 2만7000여 건의 행정심판을 처리하는데, 국민이 승소하는 경우가 17% 정도로 인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등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심판 재결의 완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심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행정심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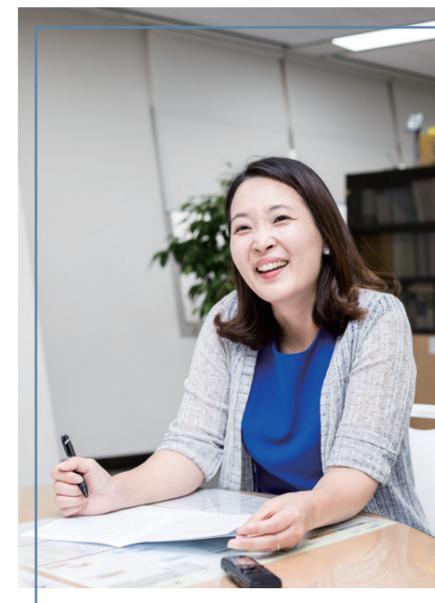


## 국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처방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13명의 전문가가 있다.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개인은 물론 팀별 역량 증진을 위해 쉽 없이 토의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욕심 없는 베테랑이자, 국민 불편의 만능해결사가 되고 싶은 국민편애자이다.

국민의 편에서 부패나 고충을 예방하는 제도 개선에 주력하며 ‘모든 것은 제도개선으로 통한다’고 말하는 제도개선총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이덕재



### 우리는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 ‘연결고리’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714건, 세부 개선방안은 4,088건에 이른다. 지난 2016년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은 230만여 건, 부패·공익신고는 6,300여 건에 달한다. 제도개선총괄과는 이처럼 수많은 국민의 소리를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우선 접수된 민원과 부패·공익신고 중 심각성, 빈발성, 파급효과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과제를 선정한다. 과제를 발굴한 후에는 현황과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도와 규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이다. 이렇게 꼼꼼한 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 관계기관에 권

고하고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제도개선총괄과가 하는 일이다. 기존 제도를 바꾸려다 보니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의견이 상충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총괄과 박지원 사무관은 부서원 각자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만능해결사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국민의 목소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관계기관에 잘 전달해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죠. 3~4개월 만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전문가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통해요. 누가 봐도 수궁이 가는 개선안을 내놓아야 원활한 협의가 가능한 만큼 문제 파악을 위해 실태 조사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나 관계기관 간담회 등도 열어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사이를 잘 연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소소해 보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제도개선총괄과는 국민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부패행위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년 취업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활동에 장애 요인을 제거,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가끔은 부작용(?)도 있다.

“불편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일상화돼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어요.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소방안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습관이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퇴근해도 off가 안 돼요(웃음). 교통 위반 사항을 보더라도 저걸 어떻게 제도 개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죠. 가끔은 그런 것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박 사무관과 부서원들은 소소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들, 관심이 없다면 절대 모를 일들에 대한 개선 업무,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에 관한 문제는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일전에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고장신고 번호는 점자 표시 없이 일반 인쇄문자만 찍혀있었다. 제도개선총괄과는 경찰청,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업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된 내용은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안내번호를 120번으로 일원화하고, 점자표기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선 경찰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규 제작 음향신호기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관계기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개선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보람이자 긍지가 된 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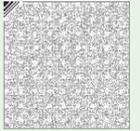
제도개선방안이 실제 어느 정도 이행되어 국민고충이 해소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올해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적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국민소통시스템’에서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평가하는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제도개선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제도개선 업무의 성적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의 업무의 가치는 국민의 인정과 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생하며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 우리 국민 누구라도 바라는 바가 아닐까.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가 있어 든든하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편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중에는 규모가 큰 과제도 있지만, 소소하더라도 일상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이 많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고충을 토로하는 민원이 1,530건 접수됐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총괄과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다른 입주자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른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이 그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2018년 2월 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의 흡연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총괄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방전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지침이 담겨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업무 노하우는 최종적으로는 제도개선으로 완결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도개선총괄과가 할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의 고충, 부당, 부패 행위 등을 개선하고 예방해, 우리 사회 체질을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부터 각 공공기관의 이행상황까지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에 권고한





# 국민 곁에서 실마리를 찾다

## 대구 달성군 죽곡10리 환경피해 예방책 마련

집이란 무릇 가장 편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집 앞에 갑자기 도로가 나고, 그 도로 때문에 조망권과 자연 훼손,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생긴다면 어떨까? 이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2년 넘게 불편을 호소해 온 주민들의 고충 이야기다. 하지만 그들의 곁에는 국민권익위가 있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국민권익위는 이로써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죽곡택지지구(매곡10리, 매곡17리, 죽곡10리) 주민 총 5,277명의 집단민원을 최종 마무리했다.

정리. 편집실



## 누가, — 왜?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지구는 약 4,700여 세대(약 18,000명)가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이다. 그런데 이 주택 단지과 불과 30m 떨어진 거리에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1공구 5.1km 구간 중 2.5km가 신설될 예정이다.

새 도로가 난다는 기쁨도 잠시,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다. 고속도로 설계 상 주택 단지 앞에 10m 높이로 흙을 쌓고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는 저층 구간의 조망권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호강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까지 단절되기 때문이다. 이에 죽곡 10리 주민 1,312명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방음시설 및 성토부 교량화 등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설계했기에 설치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변경할 경우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언제, — 어디서?

지난 7월 7일, 국민권익위 덕분에 죽곡 10리 주민들은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되었다.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소음·분진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주)한화건설,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소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무엇을, — 어떻게?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치로 인한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직으로 된 방음벽을 구부러진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했고, 주택과 가깝게 설계된 성토 구간의 약 70m를 교량으로 대체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죽곡지구가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금호대교 A2 측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강창나들목 마을 입구 교차로에는 우회전 진출 차로를 확보하고 지하차도 내 보행로를 설치해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합의된 내용을 관계기관이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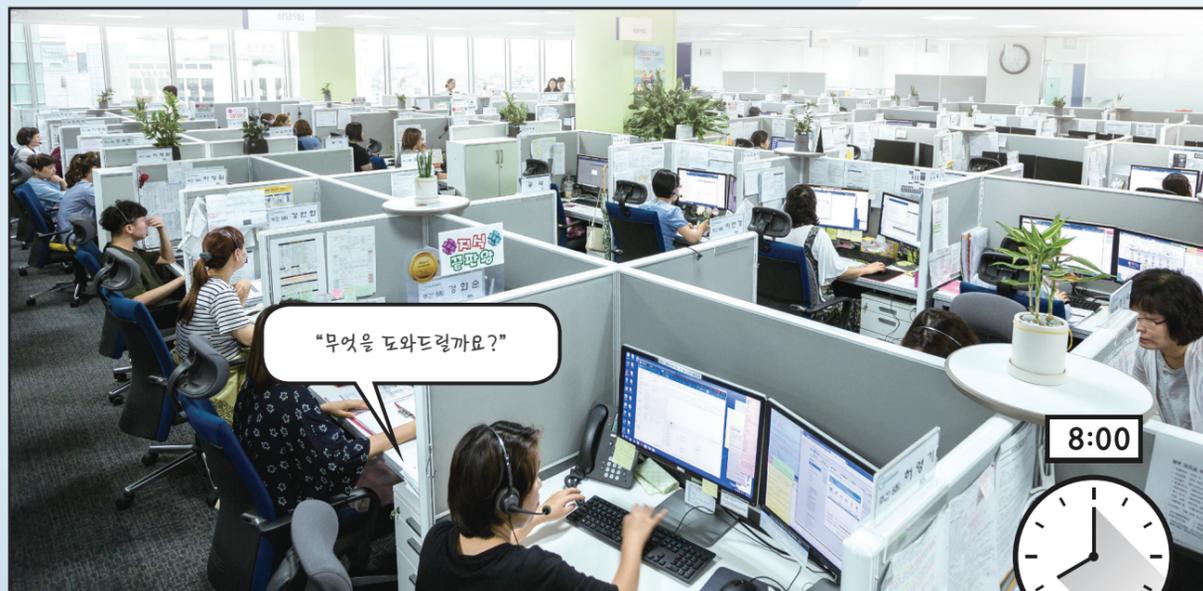


# 24시간이 모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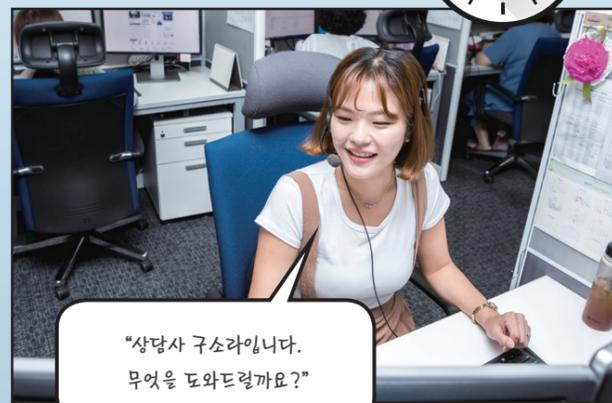
##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의 하루

따르릉~ 따르릉~ 오늘도 쉴 새 없이 전화기가 울린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언제나 국민 곁에 자리하는 국민콜110,  
 1분 1초가 소중한 그들의 숨 가쁜 일상을 소개한다.

사진. 편집실



영등포에 위치한 국민콜110. 총 125명의 상담사가 주-야 2교대로 긴급기관(112, 119 등)에서 이관되는 비긴급 업무 전화상담과 일반 정부민원, 그 외 위택스와 민원24 상담을 한다. 낮에는 주간 5개 팀과 청탁금지법 전문상담팀, 온라인 상담팀(채팅·문자·SNS 등)이 함께 국민의 민원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주간 팀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긴급기관(112, 119 등)에서 이관되는 비긴급성 문의 중에는 주로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요청사항 등이 많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신고, 유기 동물 보호 요청 및 동물 사체 처리 등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주간에는 환경오염 신고, 전기고장 신고, 경찰민원 상담, 여성 긴급전화 등의 민원이 주를 이룬다.



오후에는 팀별로 15분씩 쉬는 시간이 있어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고된 상담을 하고 나면 달콤한 간식을 먹고 기분전환을 하는 등 상담사들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주간 팀과 야간 팀의 근무교대. 야간 상담사들은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한다. 야간 팀의 경우 밤을 새워야 하고, 주간 팀보다는 근무 시간이 길기때문에 상담사들이 피로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2시간씩 수면시간을 가진다. 야간에는 소음, 취객관련 민원 등 주간과는 다소 다른 유형의 민원이 들어온다.



화상수화상담 서비스  
평일(월~금) : 2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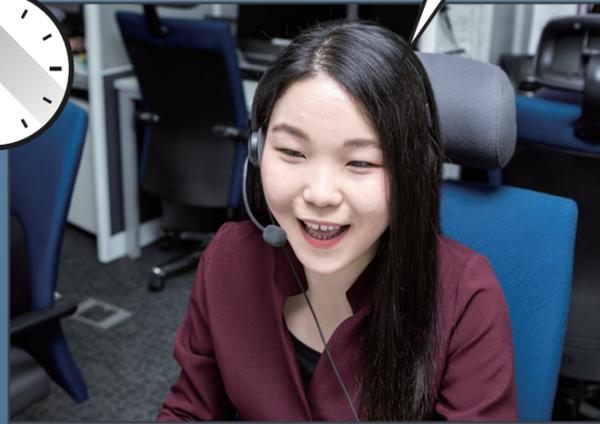


국민콜110은 농아인의 편의를 위한 화상수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평일(월~금)에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주간은 과천센터, 야간에는 영등포센터에서 수화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110 홈페이지, 110 모바일 앱, 씨토크 영상전화기를 통해 수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힘내세요... 용기를 잃지말아요!”

주로 민원이 몰리는 시간대는  
주간 팀과 야간 팀의 교대시간과 늦은 밤이다.  
다양한 민원 중 가장 대처하기 힘든 것이 자살 총동 전화다.  
그런 경우 상담사들은 민원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랜 시간 통화를 하기도 한다.  
그 이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을 진행하는데,  
민원인에게서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한다. 국민콜110 상담사는 모든 민원의 1차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차오름이었습니다~!”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국민들의 삶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부 조직 체계나 지자체 시스템에 대하여  
원스톱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받는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국민콜110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는  
국민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날 것이라고 말한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국민콜110은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도록 국민들의 생활에  
가깝고 친숙한 이미지로 남고 싶다고 말하는 상담사들, 그들의 친절한 목소리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 더욱 자세한 상담 이용안내는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홈페이지(<https://www.110.go.kr/>)를 참고하세요.

2016년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웹툰 일반부문 우수상 수상작

# 청렴 清廉고 廉깨끗한 당신의 이야기

본 작품은 사연(수기) 공직부문 장려상 수상작을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부문별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 '수상작갤러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안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

다행히  
아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씩씩하게 눈앞에 닥친 현실과  
싸우고 있었다.



엄마, 아르바이트는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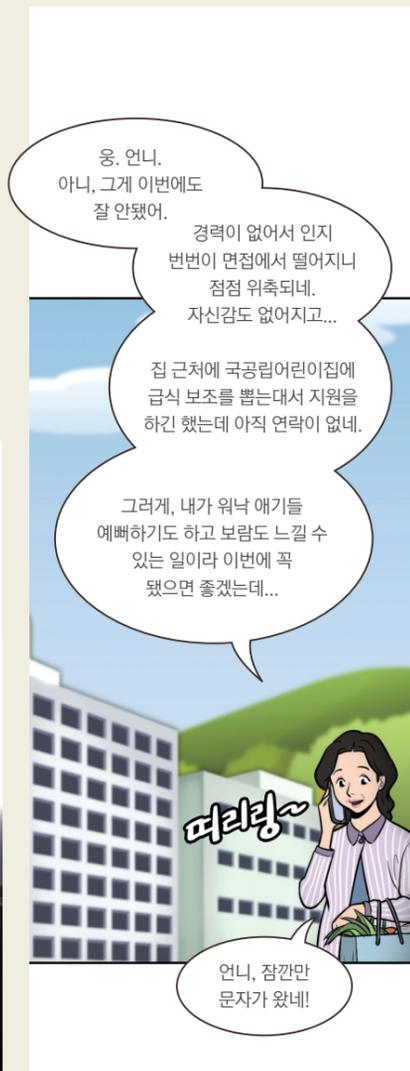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내게  
세상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휴우~



응. 언니.  
아니, 그게 이번에도  
잘 안됐어.

경력이 없어서인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니  
점점 위축되네.  
자신감도 없어지고...

집 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급식 보조를 뽑는대서 지원을  
하긴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그러게, 내가 워낙 애기를  
예뻐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라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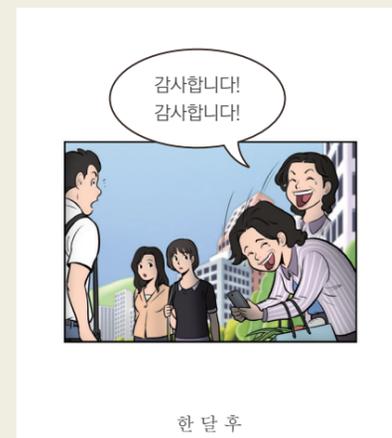
여리랑~

언니, 잠깐만  
문자가 왔네!



아!

안녕하세요  
00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연락드립니다.  
이번에 급식 보조 채용  
면담에 합격하신지  
문자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엄마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이라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도 이것저것  
요리 만들어보고  
식단 연구한다고  
쉬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적응이 돼서  
할만 해.

무엇보다 몸은 좀  
고단해도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을 보면  
피로가 싹 풀려.

그럼 수고하시고  
저녁에 봐요. 엄마~

그래  
너도 파이팅!



이상하네...  
소고기 양이 또 줄었어!



이것도,  
또 이것도...  
이게 벌써  
몇 번째야...

흠... 아침 내일이  
부식 들어오는 날이니  
조금 일찍 나와서  
직접 확인 해 봐야겠어!

다음 날



누가 있어!

흠... 역시 누군가  
부식을 훔쳐내고  
있었어!



드디어 잡았다!



어? 뭐, 왕장님!

어머, 선생님.  
일찍 나오셨네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이간...  
여차피 반찬들이 남아서  
버리는 게 많으니  
재료를 미리 좀  
가져가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정량대로 들어오는 재료를  
사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나요?

선생님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다들 이렇게 해요. 어차피 아이들이 다 먹지도 못할 거, 좋은 게 좋은 거 같아요.

자, 선생님도 조금 들고 가요.



원장님!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너무 융통성 없이 구는 걸까?

그래! 어차피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인데, 눈치껏 조금씩 집에 들고 간다고 해서 뭐 큰일이라도 나겠어?



안 돼!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굶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걸 알고도 눈감고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뭐야? 가만있지 못 해?

신고하면 직장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해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을 생각해봐! 이런 부정을 묵인한다면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



그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결국 나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운영 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원장님은 운영 비리 건 뿐 아니라 보조금 부정 수령에 관한 조사도 받게 되실 겁니다.

저희 수사결과 원장님이 보육 선생님들께 지급되는 보조금의 일부를 유용하셨더군요.



...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서류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이후로 원장님은 더욱 당당하게 일정량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 뿐 아니었다.

부식뿐인가?

원장이 자기 손녀 가져다주려고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교재나 교구도 적당히 빼돌리는 거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걸.

에이~ 그냥 모르 척 해요. 괜히 원장 눈 밖에 나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참 잘하셨어요.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쉬쉬하기 마련인데

선생님처럼 양심적인 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비리 없는 깨끗한 어린이집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솔직히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건가, 좀 겁이 나네요.

하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작년부터 어린이집 공익신고 보상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 네...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그래...



참 잘한 선택이었어.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후 맛있게 먹었어?



수상소감

### 참 잘 한 선택

정병준

우리는 어려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상식을 배우지만, 사회 곳곳에서 별 다른 죄책감 없이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를 고발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 청렴 반부패 공모전에 입상하여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 부과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5. 선고  
2017과4 결정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청렴사회를 위협하는 여러 부정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를 통해 제대로 법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에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A 씨의 위반 사례를 소개한다.



### 사실관계

A 씨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31일 퇴직한 자이다. A 씨가 근무하던 소방서는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표본 점검 등 지도·감독을 하면서, 2016년 11월 1일 감리완공신청 표본검사 결과 B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 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 주식회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소방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6년 11월 1일 17시 30분경 A 씨는 소방서 서장실에서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를 만났다. 같은 날 17시 40분경 소방서에 근무하는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이하 '이 사건 묵인지시'). 또한 다음 날인 11월 2일 16시 20분경 A 씨는 소방서 관련 팀장에게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게 하라고 지시했다(이하 '이 사건 취하지시').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제23조(과태료 부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법원의 판단

A 씨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했고, 소방서 관련 팀장에게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신고자와 소방서 관련 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 대상에서 B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B 주식회사의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했다. 이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 사건의 검토

이 사건은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이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유형의 부정청탁은, 비록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분명히 존재했었을 것이다. 소위 '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인을 위해 그 '뺨'이 되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말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둘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라는 점도 중요하다. 비록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3,000

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액수를 부과할 때 법원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만,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매우 큰 액수다. '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인을 위해 그 '뺨'이 되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내용적·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직사회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법적 처벌의 공백이 존재하였던 청탁관행 내지 청탁문화를 근절시키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하얀 세상을 꿈꾸다.

## 청렴교육 DREAM

지난 8월 2일,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 전국 각지의 선생님들이 모였다. 바로 제3기 '청렴교육 DREAM 교원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서다. 2박 3일간의 알찬 일정으로 꾸며진 청렴한 교육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편집실

※ 교육 일정 및 사이버교육에 대한 정보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www.acrc.go.kr/edu/index.do](http://www.acrc.go.kr/edu/index.do))를 참고하세요!

### 우리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세상

'청렴교육 DREAM 교원 직무연수'는 청렴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중 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과정의 주 목적은 교사들에게 「청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데 있다.

「청렴체험교육 프로그램」이란 초·중등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게임과 토론,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빙고게임과 보드게임, 청렴수준 자가진단 등 학생들이 쉽게 청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사들이 학교 현장학습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청렴교육 DREAM 교원 직무연수' 과정은 단순한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하여 청렴 팀플레이, 청탁금지법 토크쇼, 청렴콘서트 등 참여형 콘텐츠로 마련되었다. 특히 첫날 진행된 청탁금지법 토크쇼는 청렴연수원이 올해 첫 선을 보이고 있는 독창적 프로그램으로, 상황극과 서바이벌 퀴즈 등을 접목하여 교육생이 강의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교육생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소통형 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참여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 교육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청탁금지법 토크쇼는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탁금지법 토크쇼를 듣고

광주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교장 김종익



### 「교직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연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와 생생한 상황극을 통해 지루하지 않게 구성한 점이 가장 좋았어요. 사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학교 내 청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저촉되는 부분들 중에 애매한 사항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꼭 들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문춘초등학교 교장 구경순

### 「개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

“청탁금지법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학교 내에서는 청탁이 사라진지 오래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직자와 부정행위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감으로서 학교의 책임관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들으면 학생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다른 선생님들께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함께 만드는 깨끗한 세상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청렴한 공익신고로 단절!

정리. 편집실



## 공익신고자 나양심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나양심 씨. 그는 최근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렸다. 회사 측에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원, 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 여기서 잠깐!

#### 리베이트란?

요약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 제약업계에서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나양심 씨는 공익신고를하기로 결심한다. 의약품 처방을 위해 계약 판매 및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불법적인 회사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민권익위를 찾았다.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는 해당 제약회사를 조사했다. 확인 결과, 전국 500개 이상의 병원 및 의원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주유권 또는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의사와 병원사무장 등에게 제공된 리베이트는 무려 60억 원 이상의 금액이었다. 이에 제약회사 대표 및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300여 명이 형사 입건되며 사건이 종결됐다.

공익신고를 통해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이바지한 나양심 씨.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국민과 병원, 의원 관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더불어 공익신고를 통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정노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공익신고를 생활화해야 한다.

※ 이 이야기는 실제 공익신고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혹은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러시아와 한국의 청탁금지법은 '다른 길'

그동안 사회 안팎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청렴한 세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청탁금지법.

외국에도 이미 다양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러시아의 일리야에게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출처. 세계일보



## 러시아의 부정부패 방지법!

러시아에도 한국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법이 러시아에 도입된 지 6년이나 지났는데도 러시아의 부패 수준은 바뀐 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러시아판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3,000루블(약 5만2,000원) 이상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선물의 가치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 그 선물은 국가 소유가 된다.

이렇게 강력한 법이 왜 효과가 없을까? 이유는 러시아 특유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자기 일이 빨리 처리되도록 담당자에게 초콜릿이나 비싼 술을 주는 것은 구소련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온 일반적인 문화이다.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 같은 교통 위반 과태료도 대부분 3,000루블을 안 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현금으로 주고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회 맨 아래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관행은 러시아의 일상 모습이다. 이러한 문화와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일반 시민의 '일상비리'가 아니라 고위층의 부정부패다. 기업 차원에서 정부에 부정 로비를 하거나 재정 횡령 등과 같은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이 법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 법을 통과시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이 법의 첫 위반자라는 농담도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된 시점에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 밸리를 방문해서 그 당시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다. 러시아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가격이 3000루블을 넘는 스마트폰을 그가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해당 기관에 신고했는지를 궁금해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 한국 청탁금지법의 나아갈 길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작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부정부패,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한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시행 초기 일부에서 제기된 이 법이 한국 문화를 무너뜨리거나 경제를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뇌물이나 비리, 부정부패는 꼭 막아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 다만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몸조심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것도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언하긴 이르지만 한국에서도 러시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러시아보다 일상부패가 훨씬 덜한 한국에서 과연 청탁금지법이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은 자기 행동을 좀 더 조심하겠지만 기업 내 여러 가지 거래 등을 청탁금지법이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규모 부정청탁을 막는 법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위 '일상비리'를 통제하는 법을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갖고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으로 한국의 법률 시스템도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아질 거라는 점이다.

청탁금지법으로 한국의 법률 시스템도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아질 거라는 점이다.

글. 일리야 벨라코프 (방송인)



# 국민을 위해, 더 공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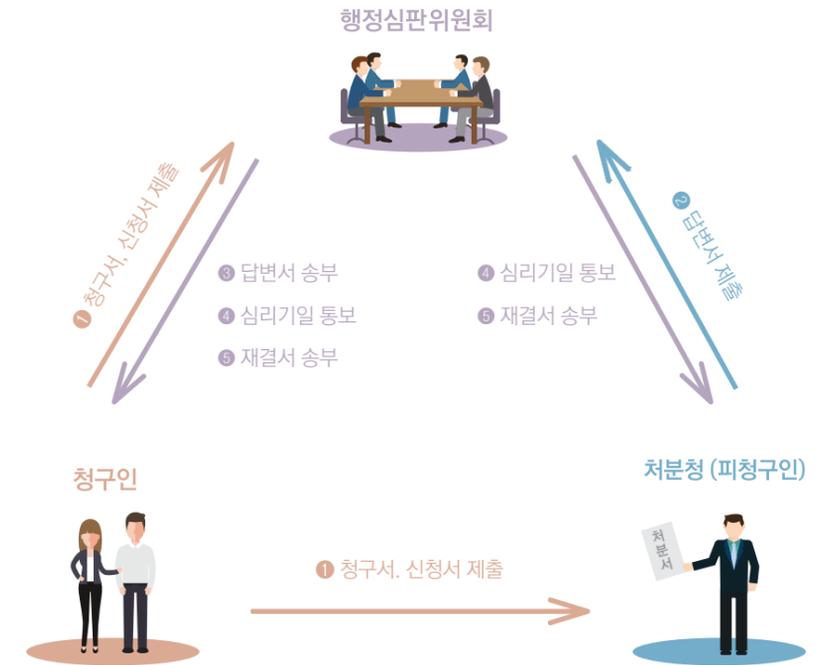
## 기능 및 중점 과제

억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청렴한 사회로의 발판을 만드는 국민권익위를 이야기하는데 행정심판을 빼놓을 수 없다. 행정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행정심판 제도. 국민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권리 구제 방안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 행정심판 처리 과정 한눈에 보기



### 국민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 수행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이며 위법성만 고려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사건의 부당성까지 판단하여 더욱더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반면 기각 재결일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일반행정심판 이외에도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별행정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은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 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해당된다.



### 행정심판, 권익구제의 뿌리가 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행정심판 제도 또한 역사 속 다양한 국민권의 구제 제도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고려와 조선에 여사, 사헌부, 의금부가 있었고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신문고가 그렇다. 지금의 행정심판법은 1985년 10월 처음 시행되어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뿌리를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은 제도의 공정성과 기관의 독립성, 결과의 실효성과 절차적 효율성 등을 확보해나갔다. 행정심판 도입 첫해에는 연간 100건도 미치지 못하는 청구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명실상부한 권리구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0년, 최초로 연간 청구건수가 3만 건을 돌파했으며, 매년 평균 16% 이상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억울함을 씻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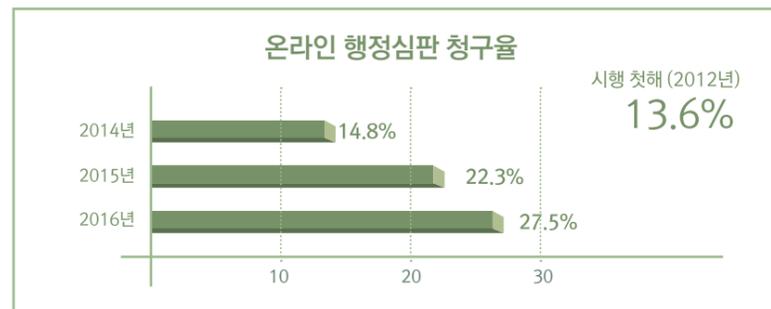
**행정심판 연도별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1,015
2013	25,570	24,405	4,227	18,820	1,358	17.3	1,088
2014	25,301	25,270	4,131	19,164	1,975	16.3	1,068
2015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1,433
20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1,699

※ 인용률(2015년 이후) = 인용건수 / 처리건수(인용+기각)

### 원스톱으로 간편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국민이 직접 관할 소관기관을 알아보고 방문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도 동일하게 행정심판 청구 및 진행 상황과 결과 확인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청구 전 유사 사건에 대한 재결례 및 판례, 상담사례 등에 대한 법률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의 청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행정심판의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행정심판의 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관계 행정기관은 재결을 따라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직접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접처분제도란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청이 해당 결과에 불복하고 인용 재결의 요지를 따르지 않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 명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 직접처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정보공개사건 : 공개대상 정보를 처분청만이 보유하고 있어 처분의 실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 불가
- 자치사무 : 지자체의 자치권을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치사무 관련 사건
- 기타사건 :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한 다수인 사건,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건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 10월부터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한다.

**〈간접강제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을 대상 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청구인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

지난 4월 간접강제제도 도입 규정 등이 신설된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 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시 재처분 의무 명시
- ② 행정청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

### 도입 추진 중인 다양한 제도들

또한,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더욱 손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와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행정심판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해줌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 갈등 조기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행정심판의 양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을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합의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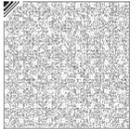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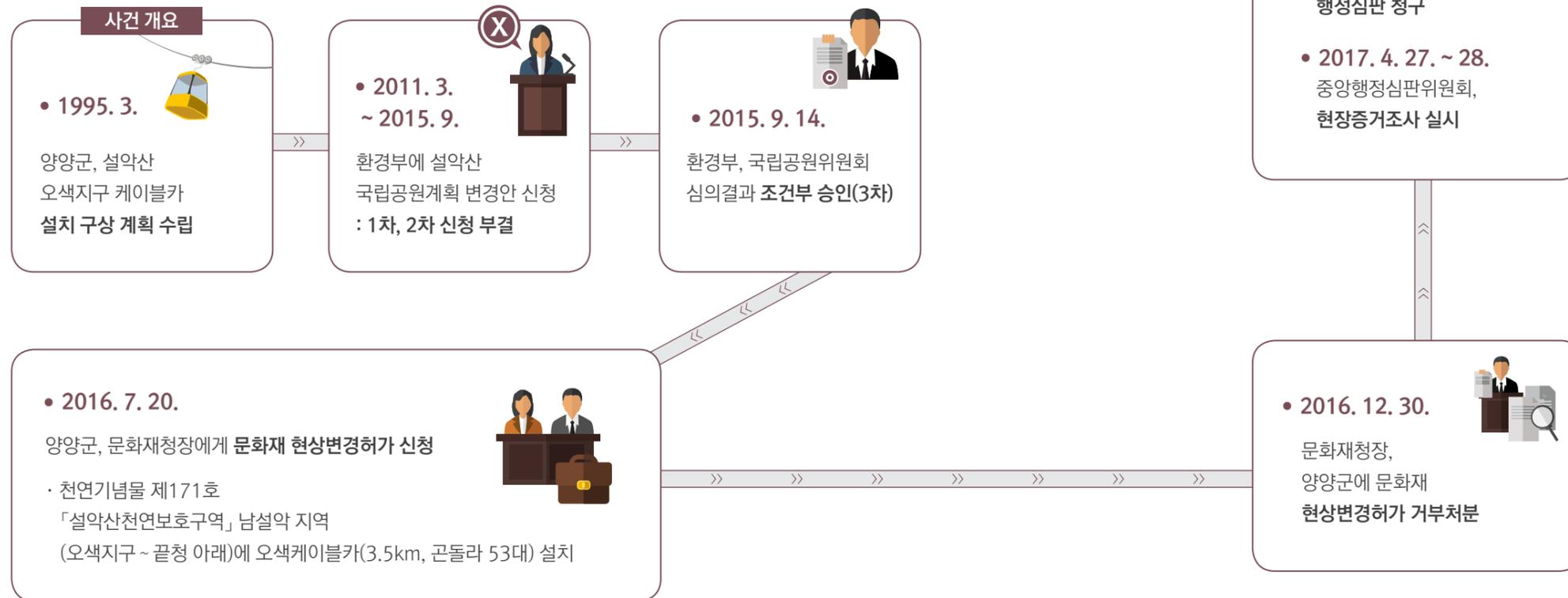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 5월 일자리와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에 대해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조정제도 또한 지난해 고충민원 조정 절차와 연계하여 추진하던 제도다.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민권익위,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거부사건 행정심판 인용 결정



강원도 양양군과 문화재청 사이에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진전 없이 골머리를 앓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리. 편집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재결의 주요내용

• 2017. 6. 15. 제21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을 이유로 인용**

• 2017. 3. 3. 양양군, 문화재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  
 • 2017. 4. 27. ~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장증거조사 실시**

• 2016. 12. 30. 문화재청장,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 **절차적 하자 부분** : 절차상 위법예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나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의 참가단체에서 이사장 등을 역임
  - 문화재위원회 의결은 거수 또는 기명투표 방식이나, 의결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실체적 하자 부분** :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다.
  -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상충함
  -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환경부장관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청구인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저감될 수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측면에만 치중한 채 그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기통제를 통해 행정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는 행정심판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향후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 미래의 법조인은 나야 나~!

##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올해로 시행 32주년을 맞는 행정심판 제도.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이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그 열기 가득했던 본선 현장을 함께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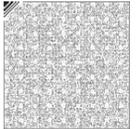
정리, 편집실



### 예비 법조인들의 논리력 겨루기 한판!

지난여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바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정 때문이었다. 전국 15개 로스쿨 20개 팀이 참여한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팀이 지난 7월,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벌였다. 이번 대회 본선에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과제로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

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쟁을 펼쳤다. 심사에는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문 교수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논리력과 이해력, 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경연 결과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가 대상을 수상했고, 각 법률단체에서 수여하는 최우수상은 영남대 로스쿨 '원용무애', 한국외대 로스쿨 '행심구명', 한국외대 로스쿨 '프Law포즈', 서울대 로스쿨 '幸齋(행심)' 팀에게 돌아갔다.



## 생생 인터뷰

대상 수상팀 '시나브law' 오일환 팀장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과 기념촬영하는 시나브law 오일환 팀장

**Q** '시나브law'라는 팀 이름이 인상적인데요, 어떤 의미로 만드셨나요?

'시나브로'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행정의 구현을 시나브로 해내어 가고 있음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원의 행정법 실력과 법조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소중한 경험들을 시나브로 쌓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Q** 본선 8개 팀에 선정될 수 있었던 '시나브law'만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을 치밀하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일관적인 논리를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검색, 검토하면서 예선에서 제시된 문제의 사실관계가 실제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 많이 알고 서면을 작성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정법상의 근거, 유사한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 법 이론적 근거, 비교법적인 검토까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로 담아내려 하였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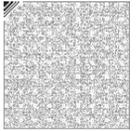
대회 준비는 생각한 것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팀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본선에 진출하고 첫 번째 경연을 마치고 나서 결선 진출 여부를 기다린 때가 가장 초조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뿌듯했던 순간은 우승 팀이 발표되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들 내심 기대를 하면서도 결선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팀원 모두가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Q**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 인정사실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내는 과정에서 숨겨진 법적 문제들과 실무에서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연에 있어서는 상대팀과의 대결적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팀의 의견에 설득력을 갖춰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상 수상 팀에게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사무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팀원 모두가 법조계에서 각자의 길을 개척하고, 또 나아가겠지만 이번에 체득하게 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실무에 나가서도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된다면, 변호사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으로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심·판

글·제13기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

## 그것이 '더 자세히' 알고싶다

### 행정심판이라고 다 같은 행정심판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기자단 이중현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행정심판도 다 같은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심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은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국민은 경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이 처분을 원천적으로 취소하고자 청구하는 것이 취소심판입니다. 공정력이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심판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해서는 확인적 쟁송과 형성적 쟁송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지만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법률적인 관계를 없애거나 변경시킨다는 면에서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집행부정지원칙'이 인정되는 심판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고 기존에 내려진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변경명령재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취소심판 사례(2015-08695)

2015년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변리사 시험에 대해 계산문제의 정답을 근사치까지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던 청구인들은 근사값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불합격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답을 기존의 정답이 '4번'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고 '모두 정답'으로 처리할 것으로 재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 효력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에는 무효확인심판, 유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의 성질에 대해서도 대립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통설적으로는 확인적 쟁송과 형성적 쟁송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송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무효확인재결, 처분유효확인재결, 처분실효확인재결, 처분존재확인재결, 처분부존재확인재결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무효 등 확인심판 사례(2015-17718)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하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2012년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3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청구인은 모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가 4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친 처분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4차 이행강제금이 2년의 법정기한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해당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재결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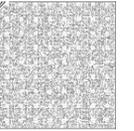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을 때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구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청구기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정지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기존에 이루어진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을 명하게 됩니다.

#### 의무이행심판 사례(2014-17051)

경찰대학에서 경비상환액 감경이행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의원 면직하였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경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게 된 사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경비를 재산정하여 상환액을 감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심판법 제5조2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을 중심으로 타 규정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신청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청구인의 상환액 감경신청은 상환명령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법하지 않은 청구로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취소심판부터 의무이행심판까지, 같은 듯 다른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심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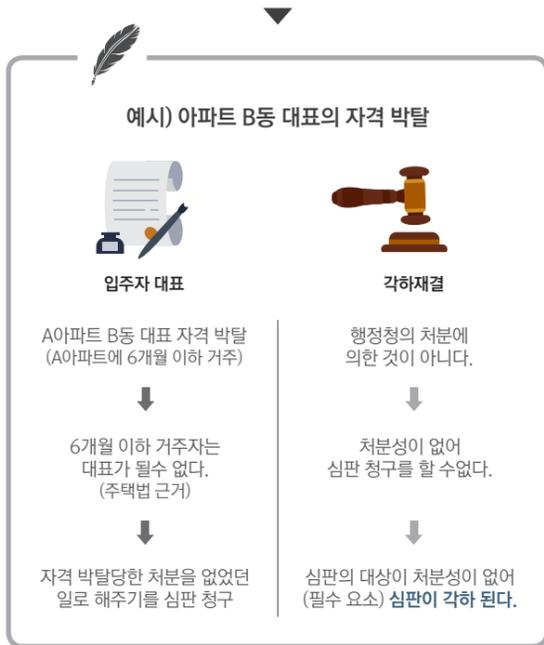


### 행정심판 재결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제13기 국민권의 블로그기자단 **박진실**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심판 ‘재결’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결과를 알게 되는데  
 이 결과를 재결이라고 합니다. 마치 소송에서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재결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 각하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 두 가지 사항을 심리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 요건 심리인데요. 이때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심리의 다음 절차인 본안 심리를 거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건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심판 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이 각하 재결입니다.  
 여기서 본안 심리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심사를 왜 청구했는지, 그것이 법에 반하는지 아닌지 등 심판의 실제적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아래의 예시가 실제 각하재결이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심판을 청구한 뒤, 위의 각하재결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각하재결과는 다르게 기각재결은 요건 심리의 다음 단계인 본안 심리를 거친 뒤 나오는 결정입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심판 청구의 내용을 두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왜 심판 청구를 했는지,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실제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본안 심리 중 실제적인 내용이 타당한 결정이었다면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이 바로 기각재결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요?



#### 인용재결

인용재결은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인용재결은 심판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적인 내용 또한 주장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용재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❶ **취소·변경재결**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결정
- ❷ **무효 등 확인재결**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자체의 효력이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
- ❸ **의무이행재결** 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

아래 예시는 인용재결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재결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내려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하재결은 심판청구 요건에 대한 심사에 그치는 것이고, 심판청구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이 기각재결과 인용재결입니다. 기각재결과 인용재결의 차이는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단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재결은 국민의 권익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판결만큼 그 중요성이 큼니다. 또한, 기각재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어떤 사례들이 기각인지 인용인지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행정심판 카테고리에서 더욱더 많은 재결 사례가 있으니 찾아주세요!

#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플랫폼' 이야기

글. 강찬고 (㈜트라이그림스코리아 대표)  
출처.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5G통신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존하는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의 연결고리

4차 산업은 물리적인 시스템과 사이버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각 지능들을 결합하여 그 '연결'을 확대 또는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에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IoT(Internet of Things)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연결에 이어 '사물'과 '기계'의 연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종전의 연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연결' 사회이며, 이러한 진화는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함에 따라 작은 사회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술과 기술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연결을 확대하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그 가치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즉 우리는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물건 구입과 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연결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에 이미 함께 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변화 '스마트 플랫폼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첫 번째 변화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소비자 주도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화'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온라인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공유 플랫폼(우버)와 숙박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를 꼽을 수 있다. 우버는 자동차 공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차량을 굳이 회사가 보유하지 않아도 차량을 공유해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우버는 창업 이듬해 2010년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해 펀딩과 투자를 받아 기업가치가 쑥쑥 커 올랐다. 에어비앤비 역시 호텔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을 쉐어하는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만 6천만 명이 넘으며,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를 무려 300억 달러로 우버와 더불어 가장 주목 받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스마트 플랫폼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개인의 삶이 안정되어 유·무형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며, 다시 기업들은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에 의해 경제가 움직일 것이며,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국가 경쟁력이 된 온라인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 회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었으며,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전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한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단순하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기술 혁신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변화, 사회와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사회적 혁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융합한 플랫폼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구시대적인 산업규제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과 관련한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육성하는 전문부처를 설치하여 이들에게 지속적인 투자와 멘토링을 제공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부터 창업과 성공적인 비즈니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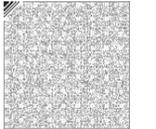
뇌경색 예방하기

# 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



암,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의 하나이며  
단일 질환으로는 국내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 뇌졸중.  
오늘은 뇌졸중 중에서도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자료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소식 2017년 5월호 발췌)



### 뇌경색이 가져오는 신체·정신적 장애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혀서 뇌손상을 발생시키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을 모두 일컫는 말로 흔히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뇌경색은 뇌조직의 손상에 따른 신체·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경색의 증상은 손상된 뇌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반쪽 얼굴·몸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말하거나 발음하기가 어려운 증상,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물체가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 동작이 서툴고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증상 등이 있다. 특히 뇌경색은 다른 뇌 질환과 달리 이러한 증상들이 징후도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 뇌경색을 차단하는 방법 :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뇌경색은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뇌경색 위험요소는 고령·고혈압·당뇨·고지혈증·흡연·심장질환 등인데 사실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평소에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내버려 두기 쉽다. 뇌경색의 위험은 일상 어디에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한편 뇌경색을 치료한 환자라면 2차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지속해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등의 뇌경색 예방제를 복용하고, 위험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방식을 조절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뇌졸중을 겪은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이 5년 이내에 재발하고, 그중 절반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경색은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후 2차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뇌경색을 대처하는 방법 : 골든아워를 지켜라

뇌경색은 골든아워(Golden Hour)가 있는 질환이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로 병원에 올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정맥에 주사(막힌 혈관을 뚫어서 뇌혈류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하는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혈전 용해치료를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미세 도관(파이프)을 이용한 혈전제거술이 개발돼 꽤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이나, 이 또한 환자가 6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뇌경색을 미리 막지 못한 경우라면 경동맥내막절제술과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다. 실제 병원에 방문한 뇌경색 환자들을 문진해 보면 다수의 환자가 위험요소를 느끼고도 치료하지 않거나, 위험요소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경우가 꽤 있다. 뇌 조직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어렵고 회복이 안되어 장애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임을 인지해야 한다. 뇌경색 후유증을 겪으며 후회하기에는 때가 늦다. 주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자기관리, 증상을 느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함이 필요하다.

<b>뇌혈관 질환을 막는 음식</b>	<b>등푸른 생선</b> 지방에 함유된 EPA와 DHA는 생성된 혈전을 용해할 뿐만 아니라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는 것을 방해한다.	<b>꼭 삶은 메주콩</b> 혈압을 낮추고 탄력 있는 혈관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대두 단백질은 물론 지방을 연소시키는 사포닌,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레시틴 등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b>토마토</b> 토마토의 리코펜은 비타민 E의 약 100배, 베타카로틴의 약 2배의 항산화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P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b>당근</b> 채소 중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은 식품이다.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이 유해물질로 변해서 동맥을 막는 것을 방지한다.
----------------------	--	--	--	--



#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반듯하게 하는 길

## 다산 정약용 유적지 탐방

남도답사 1번지라고도 불리는 전라남도 강진, 그곳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로도 유명하다. 길고 긴 귀양살이에도 좌절하지 않고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뤄낸 그의 인내와 성실이 담긴 곳. 가을 하늘 아래, 높고 울곧은 그 길을 따라가 본다.

• 글+사진. 편집실

**牧民者有四畏** 목민자유사의  
목민관은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下畏民** 하외민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고

**上畏臺省** 상외대성  
위로는 대성(감찰기관)을 두려워해야 한다.

**又上而畏朝廷** 우상이외조정  
또 그 위로는 조정을 두려워하고

**又上而畏天** 우상이외천  
또 그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그의 절친한 친구인 문산 이재의의 아들 이종영이 함경도 부령도호부로 발령받아 부임하게 되자,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라며 지어준 글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니 하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1762~1836)** 18세기 조선 실학을 대표하는 정약용은 22세가 되던 해에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정조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는다. 배다리, 수원화성, 거중기 설계 등 기술 관료의 면모도 갖춘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경기도 암행어사 시절,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에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목격하며 목민관의 의무를 절실히 깨닫고 자신만의 신념을 세운다. 하지만 정조 사후 천주교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된다. 18년간의 긴 유배생활 동안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이룬 위대한 실학자이다.



**정약용의 흔적을 더듬다\_다산기념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된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박물관이다. 정약용의 출생부터 성장, 관직생활, 유배생활, 해배 이후의 저술활동 등 다산의 삶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약용의 저작은 182책 503권으로, 대부분 강진 유배 시절에 완성되었다. 이 방대한 책의 자료조사와 저술은 제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는 10월 1일까지 기획 전시실에서 '제12회 다산유물특별전-다산 정약용과 다산학단' 전시가 진행된다.

**긴 세월 업적을 남기다\_다산초당**

다산기념관을 다 둘러보았다면 약 800m 정도 떨어진 다산초당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작은 고개를 넘어 굴동마을을 지나 조금은 가파르고 어두운 길을 걸어 올라가면 다산초당의 모습이 드러난다. 정약용이 18년에 걸친 긴 귀양살이 중 10여 년을 생활하며 실학을 집대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저술을 완성하였다. 다산초당은 숲 깊이 들어앉아있다. 이 숲은 잠시 머물렀다 갈 우리에게 아늑한 쉼터일지 몰라도, 10년 동안 갇혀있던 이에게는 숨 막힐 듯 적막한 풍경이다. 이런 외딴곳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정약용 선생을 기리며 초당 한편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해본다.



다산초당 앞에 위치한 '다조'. 차를 끓이던 부뚜막이다.



천일각에서 바라본 강진만의 풍경. 다산이 외로움을 달래던 곳이다.

**다산 기념관**

- 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다산로 766-20
- 문의 061-430-3911~6
- 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요금
 

구분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	2,000	1,000
청소년, 군인	1,000	500
어린이	500	300
- 홈페이지 <http://dasan.gangjin.go.kr>

**다산 초당**

- 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길 68-35
- 문의 061-430-3911



정약용이 손수 새긴 '정석'. 초당 뒤 언덕을 오르면 볼 수 있다.

**벗에게 마음을 나누다\_백련사**

천일각에서 돌아가는 오솔길을 따라 백련사로 향한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 걷다 보면 고즈넉한 풍경이 우리를 반긴다. 백련사는 외로운 유배의 나날을 함께 해준 혜장 스님이 있던 절이다. 다산은 밤이 되면 만덕산 자락에 자리한 백련사 혜장을 만나러 깊은 산길을 더듬어 갔다. 혜장은 언제나 따뜻한 차로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사상과 종교가 판이하게 달랐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의 벗이 되었다. 외로운 유배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인연인 셈이다. 절 앞에는 비자나무와 후박나무 등과 함께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51호)이 어우러져 있어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백련사**

- 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 문의 061-432-0837





독자의 소리

지난 <여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산업농림환경민원과에 대해 소개해 준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친근하고 믿음직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현희(인천 남구)

방송·미디어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의 참신하고 신선한 기사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영국, 미국의 반부패법을 자세히 소개해줘서 유익했습니다.

장혜림(서울 동작구)

양궁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가 청렴홍보대사라니 정말 잘 어울리는 이미지네요. 공정한 시스템에 속한 사람의 당당함과 자부심이 느껴져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렴'은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유민경(경기 남양주시)

'청렴인물 답사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을 다시금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그의 위대한 업적과 청렴 정신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에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강태균(부산 해운대구)

공익신고를 하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 섣뜻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사례를 통해 제보자의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이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윤희(서울 송파구)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이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OOOOOO OOOO'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7월 치러진 본선에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힌트 : 38-39p 테마 톡톡)

지난호 정답	아시아음부즈만협회(AOA)	
정답자	서공주(경남 창원시)	김연주(부산 사상구)
	김화경(경북 문경시)	강현숙(경기 시흥시)
	이경욱(강원 동해시)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원 이상**(100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 □ □ □



국민권익

2017 AUTUMN Vol.54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3 0 1 0 2



국민  
권익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

.....

.....

.....

.....

2. <국민권익> 가을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

.....

.....

.....

.....

**2017년 가을호**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국민권익소식지 혹은 정책홍보 - 국민권익소식지